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복 거 일
소설가·사회평론가

인전지법의 한 판사가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판사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판사의 얘기라고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정치란 말의 뜻은 여럿이다. 가장 근본적 수준에서 정치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미치는 영향들을 뜻한다. 일상적으로 쓰일 때 정치는 국가 권력과 관계된 일들을 가리키며, 이념과 당파가 두드러진 요소들이 된다. 이 둘 사이는 무척 넓고, 갖가지 뜻을 지닌 채 정치라는 말이 쓰인다.

판사와 판결

그 판사는 정치라는 말이 하나의 뜻을 지녔다고 여겼고, 끝내 법의 본질에 어긋나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이 정치적 현상이라는 사실과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 사이엔 큰 논리적 틈이 있다. 정치는 전자에선 너른 뜻을 지녔고, 후자에선 아주 좁은 뜻을 지녔다. 이 둘 사이의 틈은 너무 커서 그의 주장을 따르면, 인류가 다 들어 온 법체계와 이론이 모두 그 사이로 빠져 버린다.

법적 추리(legal reasoning)의 핵심은 연역적 추리다. 그래서 법체계는 본질적으로 연역적 체계다. 하위법들은 상위법들로부터 연역적 추리를 통해서 도출되고 재판은 법에 바탕을 둔 연역적 추리를 핵심으로 삼는다.

당연히, 법체계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법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들이 서로 다르면, 법이 제 구실을 할 수 없다. 거기서 ‘선례 구속의 원칙’이 나왔다. 판결을 통해서 법체계를 자신을 확충해 가므로, 한 번 판결이 나오면 사회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보편적 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이런 원리가 시간적으로도

작동함을 일깨워 준다.

현실에선 판사들의 해석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법체계는 그 문제를 권위 있는 최종심의 판결로 대처한다. 이 상식을 판사가 거부한 것이다. 그 판사가 그런 견해를 지니게 된 것은 근년에 우리 사회를 휩쓴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인 듯하다. 법과 정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특히 이데올로기 이론을 따른다. 어떤 이론이나 주장도 그 사람의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편향되었다는 얘기다. 마르크스 자신은 깨닫지 못했지만, 편향되었다는 사실이 어떤 이론이나 주장을 필연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만든다. 예컨대, 과학도 주술도 담론이나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주장한다. 어떤 범주에 속하면 모두 가치가 같다는 얘기다. 그 판사는 판결마다 판사의 정치적 견해가 반영되니, 모든 판결들은 동등하다고 주장한다. 선례들도 대법원의 판결들도 그저 다른 판사들의 판결이니, 따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마르크스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놓친 것은 마르크스주의도 이데올로기

포스트모더니즘도 담론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논파(論破)되었다. 과학과 주술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스트도 아쁘면 곳을 하는 대신 병원을 찾는다.

막 마흔 줄에 접어든 판사 한 사람의 주장이지만, 이 일은 보기보다 심중(深重)하다. 미국 대법원장을 지낸 찰스 휴스가 지적한 것처럼, 헌법은 실제로는 판사들이 그것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이 선 뒤 재판에 참여한 모든 판사들의 판결들을 그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가볍게 옆으로 밀어 놓는 판사 앞에 서서 판결을 기다리는 처지가 끔찍하지 않은가?

게다가 같은 견해를 지닌 판사들이 많고, 그들이 만든 단체가 근년에 법조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라 한다. 이번에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판사가 그 단체를 주도했다 하니,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사정이 좀 더 명확하게 검토됐어야 했다.

社說

5·18 헬기 사격·암매장 반드시 밝혀내야

5·18 항쟁 당시 헬기 사격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5·18 당시 헬기 조종사들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며,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3일 광주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을 찾아 헬기 사격 탄흔을 둘러보는 등 헬기 사격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광주지검은 최근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사이 광주로 출격한 군 헬기 조종사 17명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54개 상사 분량의 지난 1995년 당시 검찰 수사기록도 분석 중이며, 국방부에도 5·18 당시 군 헬기 출격 일자나 탄약 지급 여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조신부 유족 측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착수됐으며, 사건의 핵심인 헬기 사격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

이다.

한편 헬기 사격·전투기 출격 대기 등 ‘5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5·18특조위는 집단 발포 명령자나 암매장 등은 대통령이 지시한 진상 규명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특조위 활동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국방부나 정부에 추가 조사를 건의키로 해 지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이나 암매장 사실 등은 시민들의 다양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일빌딩 10층 내부 총탄 흔적으로 헬기 사격이 유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오면서 헬기 사격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암매장에 대한 광주교도소 교도관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과 국방부 조사에서도 5·18특별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져 이 모든 의혹과 진상이 낱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최선이다

최근 광주일보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집중적으로 살펴 보았다. 한창 피어나야 할 어린 생명들의 희생과 함께 그 가족들의 고통까지도 생생하게 들여다보았다. 세 차례에 걸친 ‘스쿨존 어린이 생명을 지키자’ 시리즈는 각계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최근 4년간 광주 지역의 학교 앞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모두 85건이나 됐다.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87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전남 지역에서도 모두 85건(101명 부상)의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광주에서 네 명의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한집안의 웃음을 잃게 하고, 남은 가족의 평온한 삶을 영원히 깨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관계 기관에서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형식적 캠페인에 그치는 데다 ‘어른의 눈높이’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시설의 경우 우 조기 마감 등을 이유로, 유료 시설의 경우엔 예산 등을 핑계로 ‘체험형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 및 광주·전남교육청 등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모두 85건(101명 부상)의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광주에서 네 명의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한집안의 웃음을 잃게 하고, 남은 가족의 평온한 삶을 영원히 깨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관계 기관에서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종교칼럼



장 현 권
서정교회 담임목사

다음주부터 각 교단의 교단장을 선출하는 한국교회 각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필자의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입니다. 서울에서 1500명 총대들이 모여 회무를 처리합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가6: 8).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편지를 공개적으로 씁니다.

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제102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여성명이 등록했습니다. 소견 발표도 했지요. 얼마나 허투허투가 소중하고 긴장이 되는지 후보자가 아

총회 부총회장 후보들께 보내는 편지

니만큼 잘 모를 것입니다. 후보자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총회 부총회장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될 수 있도록 지난 불노회 때 클린선거 결의 했지요. 물론 67개 노회에서 3개 노회(경북, 함해, 전남)입니다.

내용은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불법 선거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노회원의 경우 총대 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결의까지 했을까요? 결의했다고 해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총회 공명선거 지킴이들이 기도회와 결의대회도 했지요. 그동안 불법선거로 얼룩졌던 과거의 교단 선거 풍토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총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명선거 지킴이가 발족되었지요.

특히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보자님들이나 총대들이 금품이 아닌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부총회장 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로 교회의 거룩성과 개혁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할 것을 천명한 일에 박수를 보냅니다.

법과 기준을 명확히 해 잘못된 선거풍토는 반드시 쇠신하겠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며, 임원 선거 조례와 시행세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관리할 것도 결의했지요. 지금 세상에서는 불법선거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절실한 한국교회입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 정신이 믿음으로 구원이었다면 이제 21세기 제2의 종교개혁은 교회의 정직함과 바른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사명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교단 선거에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지요. 바로 조계종 적폐 청산과 종단 개혁을 위한 범불교도 대회입니다. 불교 안에도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종단의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

니다. 종교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교단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 선거와 금권 선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는 촛불민심으로 세운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특히 우리 교단이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 세상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교단 선거에서 불법이 사라지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그분의 말씀은 매우 단순하며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거 기간에 정의를 양심과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선거운동 하십시오. 그리고 총대들만을 위한 총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 소속된 모든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 등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잊지 말아주시시오.

하나님께서서는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역사와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 고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 모델 찾아야

사촌 관계를 봉계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재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지를 떠나게 하면서 경제적 수준별로 거주지역을 구분하게 했고, 저소득층의 주택을 감소시켰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아파트 건설은 공개형 아파트 문제를 만들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도시 전문가들은 이런 도시는 우리를 즐겁게도 안전하게도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 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리보다 20년 앞서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2040년엔 인자체의 절반(98%)이 사라지고, 전 국토의 61%에서 사람의 흔적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 신도시의 모델이던 다마 뉴타운을 비롯하여 대도시 곳곳에서 빈집이 늘고 있다. 버블 경제시대에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폭락으로 아직도 주택 구입비를 갚지 못하여 떠나지 못하는 상황도 초래했다. 매년 3000만여 명이 고독사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내일의 우리 도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도시들은 대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령화 사회와 상대적 빈곤에 대비하라는 OECD의 권고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내일도 오늘과 같은 문화를 만들고, 가족중심 제도는 이웃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구상에서 소멸할 1호 국가라는 지적을 고려하면, 하구기 삶의 질과 도시 미래를 결정할 상황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 중 하나가 인간관계의 강화를 통한 공동체 재생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 중심성 재생을 통한 도시 축소의 실현이다.

도시에서 소홀히 해온 공동체를 되찾아서 재생하는 일은 새로운 도시의 첫 번째 책무다. 그간 우리 도시들은 사회적 규범으로 공동체 의식이 남아있는 단독 주택이나 골목길, 언덕 등의 그라운드를 무시하고 파괴해 왔다. 이는 공동체의식 붕괴는 물론, 도시 기억과 전통 풍경의 상실로 이어졌다. 그라운드가 무시되면, 사람의 도시가 될 수 없다. 이제는 그라운드 보존을 바탕으로 마을, 토지, 사람의 관계가 거주 공생, 지역 공생, 환경 공생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들 지역을 현재처럼 시장에 맡기게 되면, 도쿄대학 히데 요시오노 교수 말처럼 기성 시가지는 더욱 황폐해지고 사회적 약자가 더욱 고립되거나 사회적 격차가 굳어질 것이다.

낯과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져갈 운명에 있는 그라운드가 새로운 도시를 찾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물리적 공간을 사회적 공간으로 재생해야 한다. 그래야 소통과 공동체의 도시가 될 수 있

다. 일본 오세다 대학의 고토우 하루 히코 교수는 기능별로 도시를 분할하던 미분형 도시계획에서 사회관계성을 통하여 통합하는 적분형 도시계획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라고 했다. 그래야 봉계한 열연가족이 사회가족이 되고 절연생활, 고독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하나의 책무는 확산형의 현재 도시에서 축소형의 새로운 도시를 찾는 일이다. 근대 도시계획은 도시의 집약성을 배제하고, 교외화에 지중했다. 우리 도시들은 이에 충실해왔기 때문에 시가지 면적 이 지나치게 확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무거주 지역이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도시는 확산형에서 축소형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축소형 도시는 도시거점으로써 기성시가지 기능을 재생하는 일이 핵심이다. 그래야 집약형 도시로 축소될 수 있다. 도시 재생은 지속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내과적 수술과 같이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도시를 재생시킨다고 한다. 우리 도시는 이를 공동체가 살아 있는 집약형 도시로 재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인구감소 시대에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의 도시가 될 수 있다.



조 응 준
조선대 명예교수

지금 우리 도시는 인구 감소와 함께 급격하게 늙어가고 있다. 도시 기억도 잃어가고 있다. 1인 가족 증가와 함께 혈연 가족이 붕괴하고,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이 고령화를, 빈곤 노인을, 부양 부담률도 OECD국가 중에서 높고,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의 진입기간도 가장 짧은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도시공간의 지지가 필요한 재정 부족을 증가시키고, 열악하게 한다. 또 무거주 지역 증가와 함께 고스트 타운이 발생하는 등 도시 장래를 보장할 수 없게 한다.

더구나 압축성장으로 선진국만큼의 산업·기능적 성과를 거둔 우리나라는 많은 비만에 직면해 있다. ‘규모별, 거주형태별 아파트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계층 문화를 만들고, 가족중심 제도는 이웃

無 等 鼓

지난 2001년 광주 동부경찰은 일반인에게는 매우 생소한 혐의로 어느 병원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 위반이었다. 이들은 의학용으로 기증받은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을 해부학 실험 준비실 등에 수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시체의 화장)은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그 시체를 화장하여 유해(遺骸)를 납골당에 안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도의적으로 망자에 대한 무례를 찾아줘야 했으니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쉬쉬하며 덮으려는 의압을 견뎌 내고 일부러 보도 자료까지 냈다. “의료인들께 무례하게 된 망자에 대한 무례를 바르게 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사실상 이를 계기로 지역 병원에서는 시체 기증자에 대한 추모식을 여는 게 정례화됐다. 최근엔 또 의과대학 등이 의학 교육 시 신 기증인 합동추모식을 엄수하고 유골을 별도 추모관에 모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의료인들의 사체에 대한 모멸 해저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의사들이 소설 미디어에 ‘토요일 카테바(기증된 시체) 워크샵, 매우 유익했다. 자국이 되고’라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게 사달이 났다. 시신을 두고 웃음을 띤 채 기념 사진을 찍어 국민적인 공분을 산 것이다. 이들 역시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시체해부법(시체에 대한 예의 조항)을 위반했다. 결국, 의사들의 무례는 법 개정의 발단이 됐다. ‘시체에 대한 예의’ 조항의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한층 강화됐다.

굴욕적이게도 의료인들은 앞으로 윤리 교육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보수교육에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제도 정비에 앞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온 몸을 내놓은 망자들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범죄를 떠나 살아 있는 자의 도리다. 의료인들에게 인간에 대한 예의를 기대하는 건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 취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52	220-0515 문화사업국 (FAX 222-8005) 227-9600 업 무 국 (FAX 227-9500) 220-0536 서 울 지 사 (FAX 02-773-9331)	220-0541 (FAX 222-0195) 220-0551 (FAX 222-0195)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